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2019.12.31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전화: 02-2670-9110 | 전송: 02-2635-1134

목차

1. 서	1
2. 한국경제 현황	3
3. 새로운 위기 가능성과 한국경제 전망	24

1. 서

2018년에 집권여당을 한편으로 하고 보수정파들 및 보수언론을 다른 한편으로 해서 경제실정 공방이 치열했다. 후자는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했고, 전자는 고용사정이 기대만큼 좋지 않지만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고용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산업활동 통계와 소득분배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두 진영 사이의 공방은 반복되었다.

양자 사이에 의견불일치는 어디에서 비롯했을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서로 다른 위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 유리한대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경제는 97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구조적 위기(이윤율 저하, 독점자본의 지배로 인해 장기저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 반드시 구조적 위기 전 기간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에 빠져 있었고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화되었지만 순환적 위기, 즉 공황과 뒤이은 불황에 진입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쓰러지고 2개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후자 즉 마이너스 성장을 2개 분기 이상 지속하고 상당수의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의 도산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에서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한 것이고, 보수정파들이나 보수언론에서는 고용부진, 저성장 등 구조적 위기 및 그것의 심화 현상을 들어 경제위기가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양쪽 다 한편으로는 맞고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주장을 한 것이다. 즉 정부여당은 순환적 위기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한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애써 모르는 척 했다(물론 모를 수도 있다고 보지만). 보수정파들이나 보수언론은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면 크게 틀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구조적 위기 하에서 당장 순환적 위기, 즉 공황으로 진입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게 한 것은 틀렸다고 본다. 즉 둘은 알았던 몰랐던 서로 다른 경제위기 개념이나 상에 기초해 공방을 벌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들어 취업자가 예년 규모로 증대하기 시작하고, 최저임금이 2.9%라는 매우 낮은 인상률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야 이 둘의 공방은 점차 잦아들었다.

한편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은 매우 낮아 올해 정부여당

이 설정한 2.6-2.7% 성장은 이미 불가능해졌고 2% 성장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즉 구조적 위기, 즉 장기불황 상태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벗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순환적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순환적위기에 진입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기로 한다. 우선 한국경제의 현황을 살피고 한국경제가 다시 순환적 위기에 빠져들 위험은 없는지 관련 변수들을 알아보기로 하자.¹⁾

1) 여기서 자주 사용되는 구조적 위기와 순환적 위기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연원한 개념으로, 관련 논의는 김성구(2018),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공황론』, 나뭇잎스를 참조하라.

2. 한국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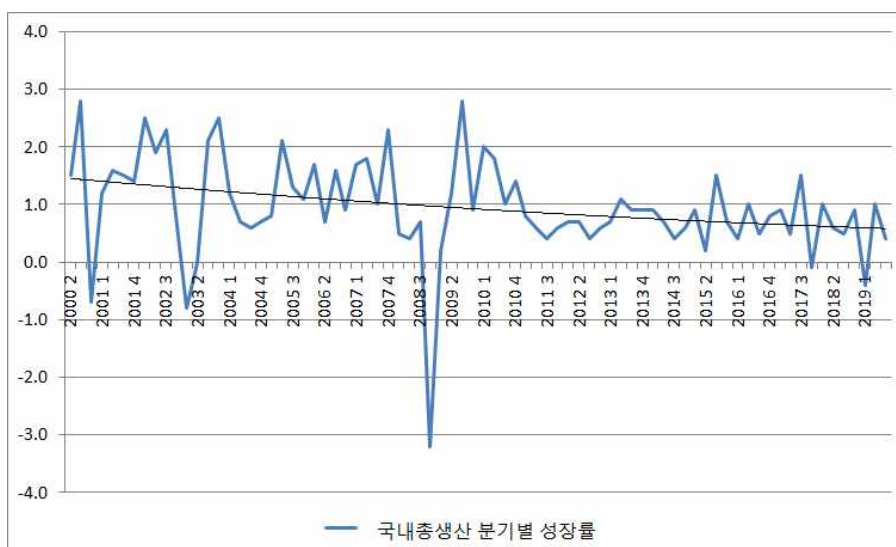
1) 성장률

(1) 국내총생산

2019년 1사분기에 전기 대비 -0.4%라는 역성장을 한 한국경제는 2사분기에 1.0%, 3사분기에 0.4%의 성장을 이어가 2개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는 않았다. 즉 순환적 위기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3사분기 성장률이 극히 저조해서, 애초에 정부가 세웠던 성장전망치 2.6~2.7% 달성은 불가능해졌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정한 새로운 목표치 2% 달성조차 불확실해졌다. 설사 2% 성장을 간신히 넘긴다 해도 2018년의 2.7% 성장에 크게 못 미치게 된다(<그림 1> 참조).

사실 한국경제는 <표 1>에서 보드시피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고, 97/98년 아시안 위기, 1997/98년 외환 위기를 경계로 성장률이 대폭 하락하였다(<표 1> 참조). 그러던 것이 2011년 이후 매년의 성장률이 2~3%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에는 2% 성장마저 불투명하게 될 정도가 된 것이다.

[그림 1] 국내총생산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표 1] 경기순환별 국내총생산증가율

	'63-'79 (16년)	'79-'97 (18년)	'97-'08 (11년)	'08-'18 (10년)
경기순환별 국내총생산증가율	10.6%	8.5%	4.6%	3.1%
경기순환별 1인당 국내총생산증가율	8.4%	7.3%	4.0%	2.6%

자료: 한국은행

한편 이 성장률은 실질경제성장률인데 여기에다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 경상성장률이다. 대개는 경상성장률은 물가성장률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실질성장률보다 높다.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국내총생산 관련 물가상승률이라 할 수 있는 GDP디플레이터가 올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상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더 낮아졌다. 화폐소득성장률(경상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더 낮아진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 소비

전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19년 1사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1%, 2사분기는 0.7%, 3사분기는 0.1%로 거의 정체수준에 도달해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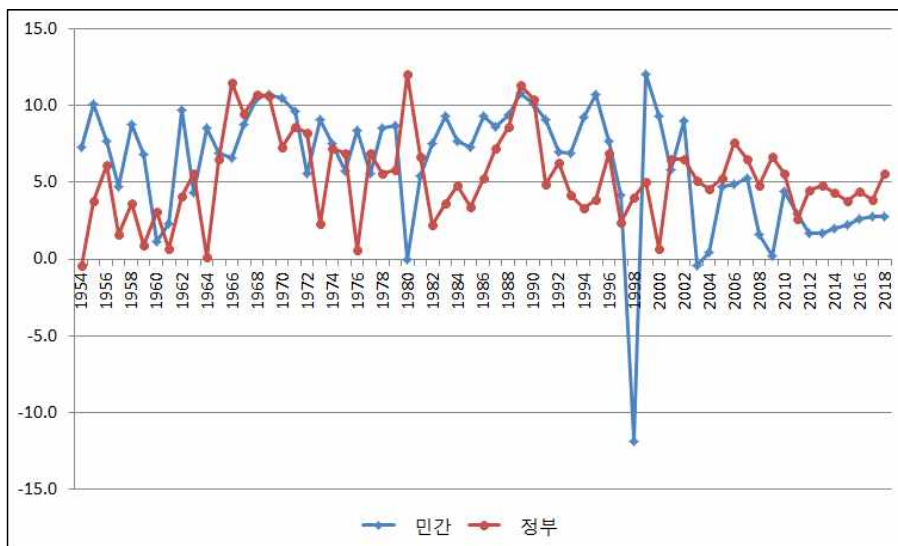
[그림 2] 민간소비 증가율(전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한편 <그림 3>에서 보듯이 2012년 이래 정부소비 증가율이 민간소비 증가율보다 더 크다. 즉 정부소비가 아니었다면 성장률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림 3] 민간소비 증가율과 정부소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3)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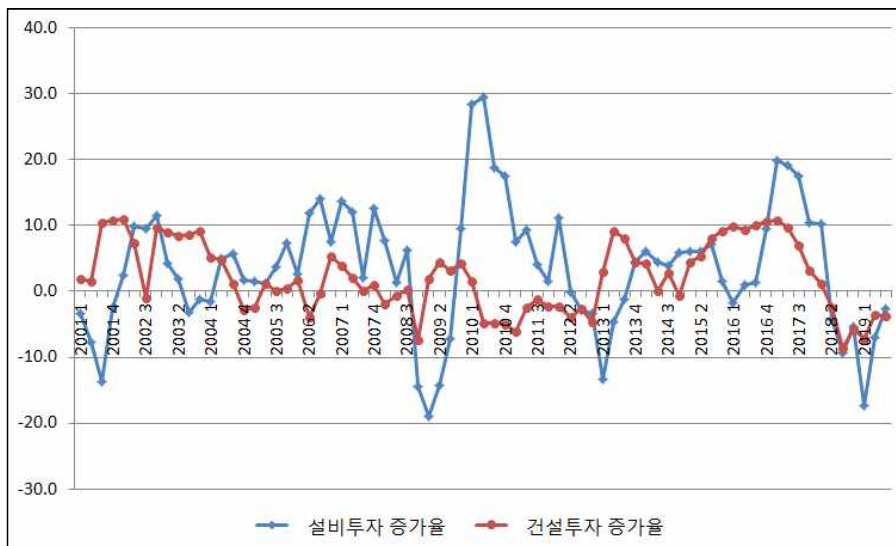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8년 3사분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1사분기 -17.4%, 2사분기 -7.0%, 3사분기 -2.6%를 기록해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 3사분기에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설비투자 절대액수는 2018년 3사분기보다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투자 역시 2018년 3사분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4>, <표 2> 참조).

[표 2] 설비투자 증가율과 건설투자 증가율

	2018. 1/4	2018. 2/4	2018. 3/4	2018. 4/4	2019. 1/4	2019. 2/4	2019. 3/4
설비투자 증가율	10.2	-4.3	-9.4	-5.3	-17.4	-7.0	-2.6
건설투자 증가율	1.2	-2.5	-8.7	-5.7	-7.2	-3.5	-3.7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설비투자 증가율과 건설투자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4) 수출

2007/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이후 2010년과 2011년 재화수출도

일정하게 회복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를 필두로 유로존 경제가 곤두박질 친 2011년 이래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분기별로 5% 이상 성장한 분기가 별로 없다(<그림 5> 참조). 2019년에 들어서는 1사분기 -0.9%, 2사분기 -0.7%, 3사분기 -0.1% 증가율을 기록해 3개 분기 전부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내수증가율은 1사분기 -0.7%, 2사분기 1.1%, 3사분기 1.4%를 기록해 증가율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수출증가율보다는 낫다. 한국경제에서는 수출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는데 2109년은 그렇지 못했다(<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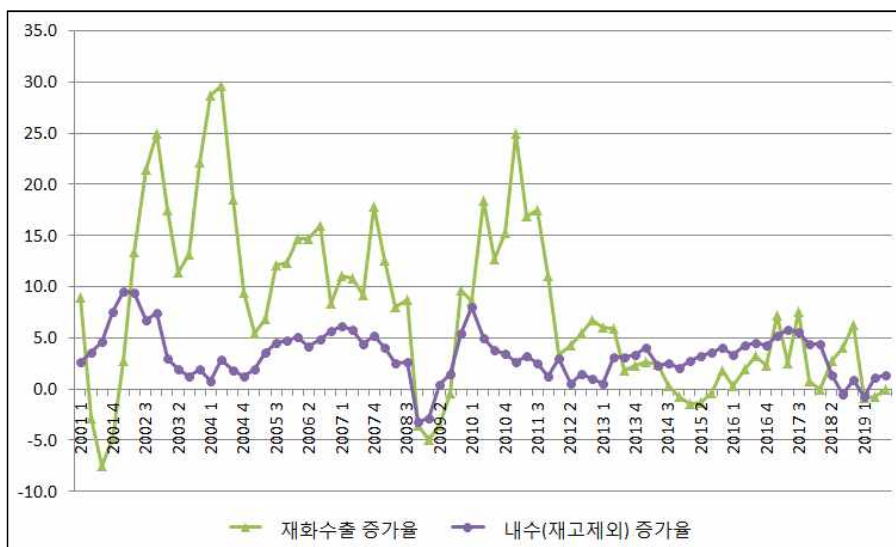
한편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수출단가가 하락해서 물량이 기준이 되는 수출증가율에 비해 금액기준으로는 더 하락했다.

[표 3] 수출 증가율과 내수 증가율

	2018. 1/4	2018. 2/4	2018. 3/4	2018. 4/4	2019. 1/4	2019. 2/4	2019. 3/4
재화수출 증가율	0.0	2.8	4.0	6.3	-0.9	-0.7	-0.1
내수(재고제외) 증가율	4.4	1.4	-0.5	0.9	-0.7	1.1	1.4

자료: 한국은행

[그림 5] 수출증가율과 내수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2) 재정수지

한국의 재정수지는 OECD 집계 기준으로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흑자다. 즉 긴축재정이었다(<표 4> 참조).

2019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재정수입은 406.2조원, 지출은 417.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1.4조 적자였다.²⁾ 남은 두 달 동안의 수입, 지출에 따라서는 아주 작은 규모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 봤자 국내총생산 대비 1% 이하 적자 규모일 것으로 본다. 만일 적자가 난다면 이는 미세한 적자가 난 2015년 이래 4년 만이다. 그런데 2018년과 올해 진행된 경제위기 혹은 고용참사 논란에 비춰보면 적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다른 나라들처럼 상당한 규모의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표 4] 주요국 잠재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규모

	2007	2017	2018
한국	2.6	3.4	3.2
프랑스	-4.4	-2.3	-2.1
독일	-0.8	0.2	1.2
이탈리아	-3.1	-1.3	-1.3
일본	-3.6	-4.3	-3.6
스페인	-0.1	-1.0	-1.5
영국	-5.1	-2.0	-1.7
미국	-4.8	-4.7	-6.1
OECD	-3.1	-2.3	-2.8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표 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 국가의 재정수지인데 긴축정책으로 악명

2)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2월<제 71호>

을 떨치고 있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재정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2018년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 대비 -6.1%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20%가 넘는 일본마저도 3-4%대의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역시 두 배 다 적자다. 한국과의 대비가 너무 뚜렷하다. 이들 나라들 정부부채 수준이 양호한 것도 아니다. <표 5>를 보면 한국 정부 정부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 대비 43.2%(2017년)임에 반해, 일본 221.1%(2017년), 미국 107.3%(2018년: 이하 동일), 영국 112.9%, 독일 68.3%, 프랑스 122.4%, 이탈리아 148.0%, 스페인 113.3%로 전부 한국보다 더 규모가 크다.

[표 5] 주요국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규모

	2007	2017	2018
한국	27.6	43.2	
프랑스	75.9	123.0	122.4
독일	65.1	72.4	68.3
이탈리아	110.7	152.9	148.0
일본	156.3	222.1	
스페인	41.8	114.6	113.3
영국	49.7	116.3	112.9
미국	64.6	106.1	107.3
OECD 평균	73.0	110.3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3)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근 들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오가고 있다. 변동이 심한 곡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991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2015/16년 이래 하락세가 뚜렷하다. 2019년 3월 이후 근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이엠에프 위기 와중에 기록한 낮은 근원인플레이션율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디플레이션에 근접하고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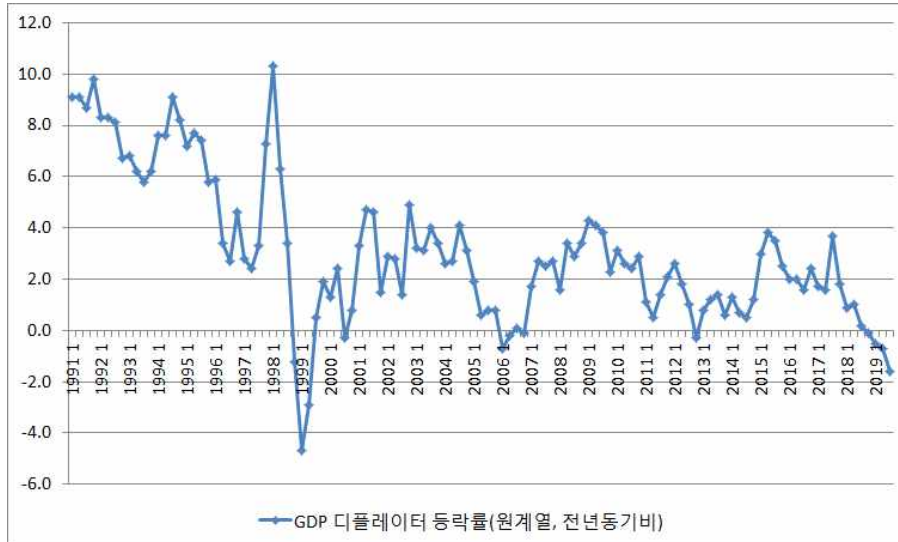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편 소비·투자·수출입을 모두 반영한 경제 전체의 물가를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018년 4사분기 이후 -0.1%, -0.5%, -0.7%, -1.6%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 하락정도가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다(<그림 7> 참조). 정부는 2019년 연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0.8%로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 실질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이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0.8%를 감안하면 경상경제성장률은 1.2%에 머물게 된다.³⁾ 화폐소득증가율은 실질성장률보다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3) 기획재정부, 「2020년 경제전망」, 2019. 12. 19.

[그림 7] GDP 디플레이터 등락률



자료: 한국은행

4)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전에는 5%를 넘은 적도 있었으나 현재 1.25%다. 2017년 9월 1.25%로 정해졌다가 그 이후 0.25%씩 두 차례 인상했다가 2019년 다시 0.25%씩 내려 사상 최저 기준금리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낮은 기준금리의 의미는 이후 새로운 순환적 위기가 도래해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자고 해도 인하폭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 것도 없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5.25%에서 단시간 내에 2%로 기준금리를 내려 무려 3.25%를 내렸는데, 가까운 장래에 위기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그림 8] 한국은행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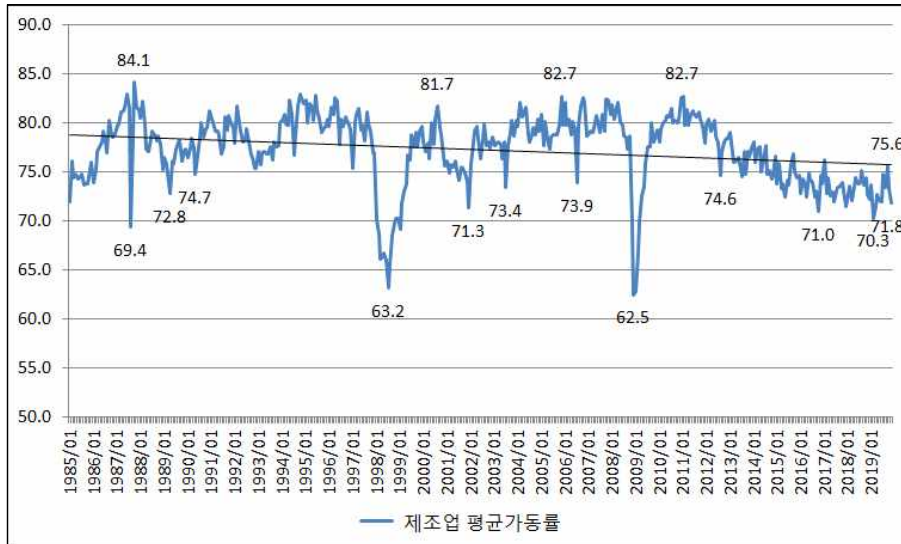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5) 제조업평균가동률 및 재고율지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경제위기 때는 60%대를 기록하고(경제위기가 아닌 시기인 1987년 8월에 69.4%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노동자대투쟁 때이다. 대투쟁이 거의 종료된 10월에는 84.1%라는 경이적인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위기를 벗어나면 70-80%대를 기록하고 대체로 75%를 상회한다. 그런데 2008년 위기 이후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이전 시기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82.7%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15년 이래 경제위기 수준을 의미하는 60%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75% 이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2019년 2월엔 70.3%의 매우 낮은 가동률을 기록했다가 9월엔 75.6%로 상승했다가 11월엔 다시 71.8%로 내려앉았다. 경제위기의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림 9] 제조업평균가동률(1985.1-2019.11)



자료: 한국은행

계절조정 재고지수를 계절조정 출하지수로 나눠 구한 비율인 제조업재고율지수는 2010년 이래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5월에는 117.9를, 2019년 11월엔 115.8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재고율지수는 IMF 위기가 한창일 때 기록한 140.1보다는 낮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기록한 102.2보다는 훨씬 높다. 재고율지수가 꽤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다.

[그림 10] 제조업 재고율 지수(1985.1-2019.11)



자료: 한국은행

6) 고용⁴⁾

(1) 취업자수

취업자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적용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고용쇼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2018년 1월 취업자수(계절조정)가 2,689만 8천명에서 2018년 8월 2,674만 7천명으로 15만 1천명이 감소한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취업자수는 다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8년 12월 취업자수는 2017년 12월의 취업자수에 비해 2만 천명이 증가하였다. 2019년 12월 취업자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10.9%로 꽤 높게 올랐었는데도 2018년 12월에 비해서는 51만 7천명이 증가하였다. 즉 ‘고용쇼크’ 논란이 일었던 2018년에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매우 적었지만 2019년에는 2015-2017년의 증가폭을 회복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림 11] 취업자수(계절조정)(1999.06-2019.12)(단위: 천명)



자료: 국가통계포털

4) 보고서 초고작성이 끝나고 이후 수정보완 과정 중에 2019년 12월 고용통계가 발표가 되어서 이 통계치를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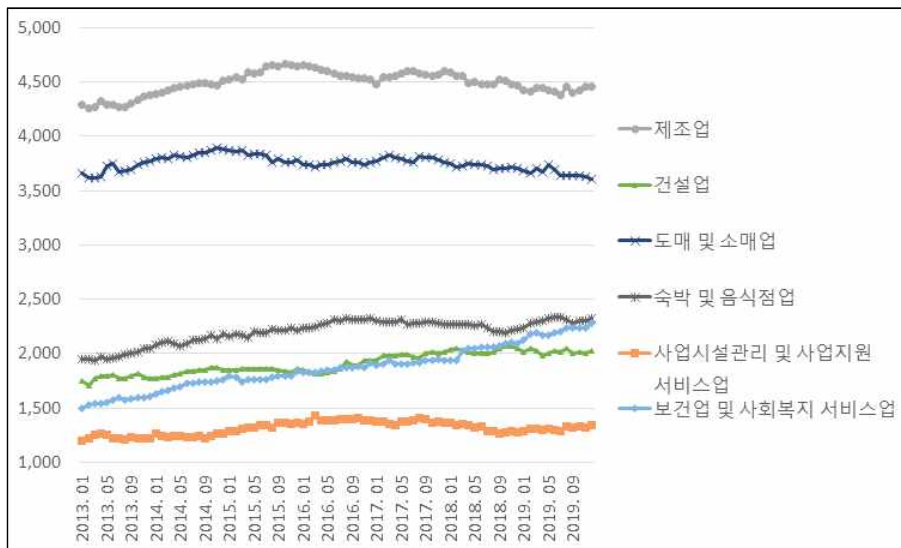
(2) 산업별 취업자수

일단 제조업 취업자수는 2015년부터 추세적으로 줄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은 2014년부터 줄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제조업은 조선, 자동차 산업 불황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고,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수 감소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온라인 혹은 모바일 쇼핑 증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급증은 정부의 초단기 노인일자리 증대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편향은 업종의 일자리는 줄어 들고 있고 저임금 단시간 업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2] 산업별 취업자수 변동(계절조정)(2013.1-2019.12)(단위: 천명)



자료: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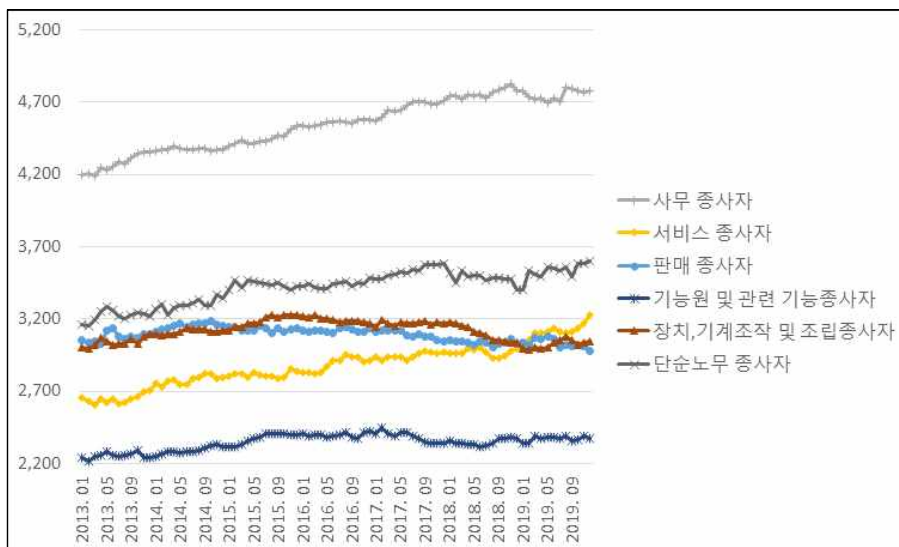
(3) 직업별 취업자수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2015년부터, 판매종사자는 2014년부터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최저임금이 상당폭 오른 2018년에는 그 감소세가 조금 더 심해졌다가 2019년에 들어서는 뚜렷한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2018년 훨씬 이전부터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런 직업의 일자리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9년에 뚜렷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누적효과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의 인과관계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2018년과 2019년 전반기에 벌어진 사회적 대소동은 정치공세 성격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 종사자의 급증에서 보다시피 정부지출 증대를 통한 일자리 증대효과는 뚜렷하다. 최저임금의 상당한 인상과 일자리 증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다만 임금, 노동시간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해야겠다.

[그림 13] 직업별 취업자수 변동(계절조정)(2013.1-2019.12)(단위: 천명)



자료: 국가통계포털

(4) 연령대별 취업자수

20대 취업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줄어들다가 2010년대 초반 이후 조금씩 늘고 있다. 30대 취업자수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줄고 있고, 40대 취업자수는 2010년대 중반부터 줄어들고 있다. 30대와 40대의 취업자수 감소는 많은 부분 해당 연령대 인구감소와 관계가 깊다. 물론 최근 40대 고용률의 감소는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50대와 60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50대는 상대적으로 2000년대에 급격히 늘었고, 60대는 2010년대에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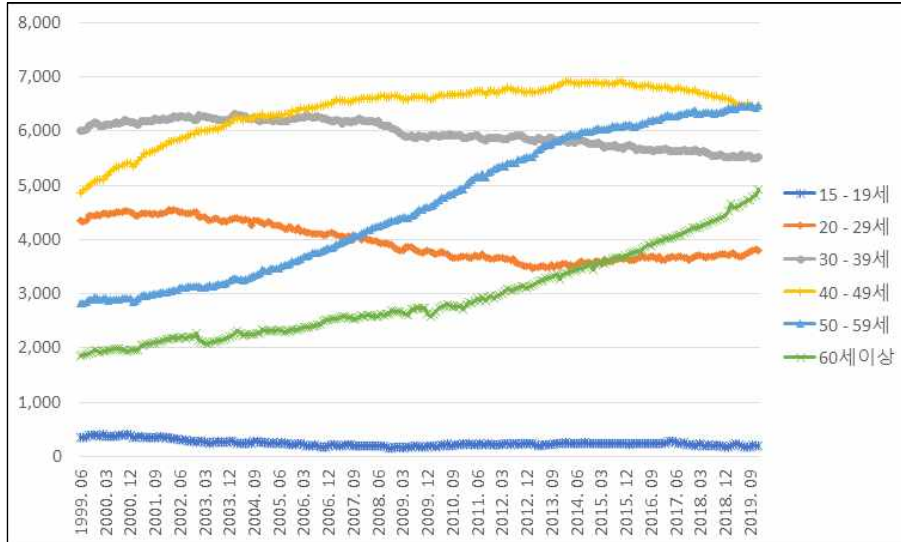
2019년 취업자수 증가는 50대에서 약간 늘었고, 주로는 60대에서 늘었는데 60대 취업자수 증가는 평균 초단시간 노인일자리 증가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그림 15> 참조). 노인일자리 수는 2019년 61만개로 계획되었는데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평균 보수 27만원을 받는 ‘공익활동’ 일자리(44만 1천명), 월평균보수 10만원을 받는 ‘재능나눔’ 일자리(4만 7천명), 월평균 보수 26만원을 받는 ‘시장형 사업단’ 일자리(6만명)가 대부분이고 이들 일자리수가 도합 54만 8천개이다.⁵⁾

한편 이런 노인 일자리 수 증대는 한편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을 합해 30%를 넘지 않는 수급비율, 적은 연금액 등으로 인한 노인빈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쁜 고용상황을 적은 예산을 들여 가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해야겠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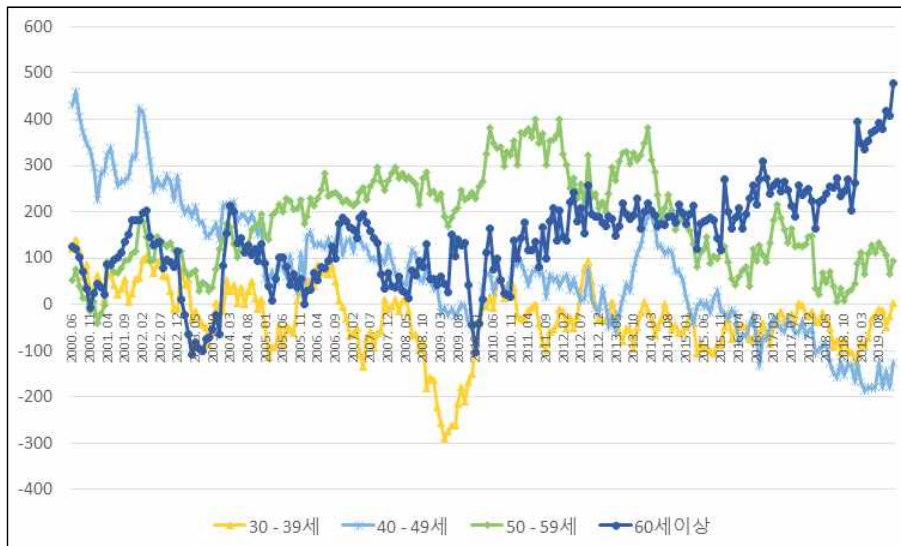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_NT_SEQ=347260 를 참조하라.

[그림 14] 연령대별 취업자수 변동(1996.06-2019.12)(계절조정)(단위: 천명)



자료: 국가통계포털

[그림 15] 전년동기 대비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2011.1-2019.12)(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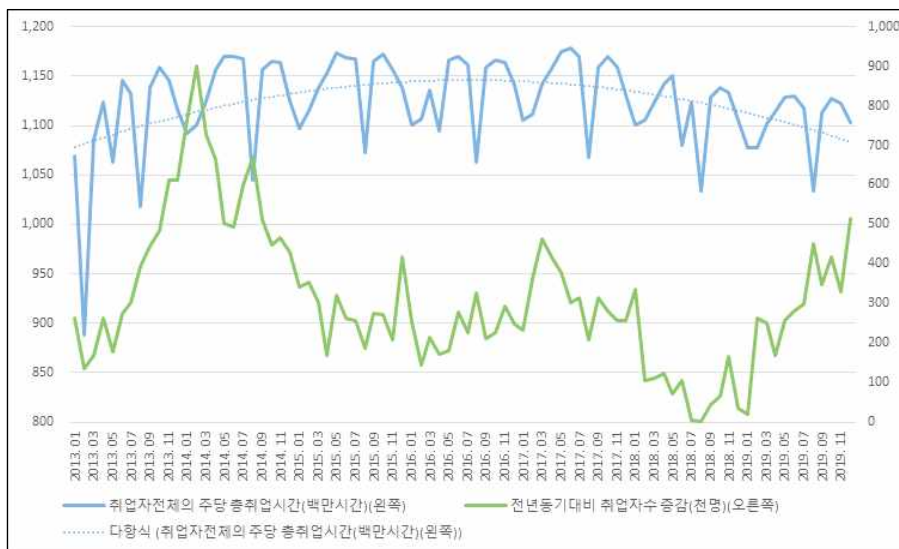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5) 총취업시간

총취업자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들 취업자들의 주당 총취업시간은 2018년과 2019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2017년 1,144 백만시간 → 2018년 1,113 백만시간 → 2019년

1,104 백만시간). 즉 취업자 기준으로는 고용이 여전히 늘고 있지만 취업시간 기준으로는 고용이 줄고 있는 것이다. 평균취업시간이 줄어든 탓이다(<그림 16> 참조). 이는 성장률 둔화, 최저임금 인상,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효과일 것이다.

[그림 16]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과 전체 취업자 주당 총취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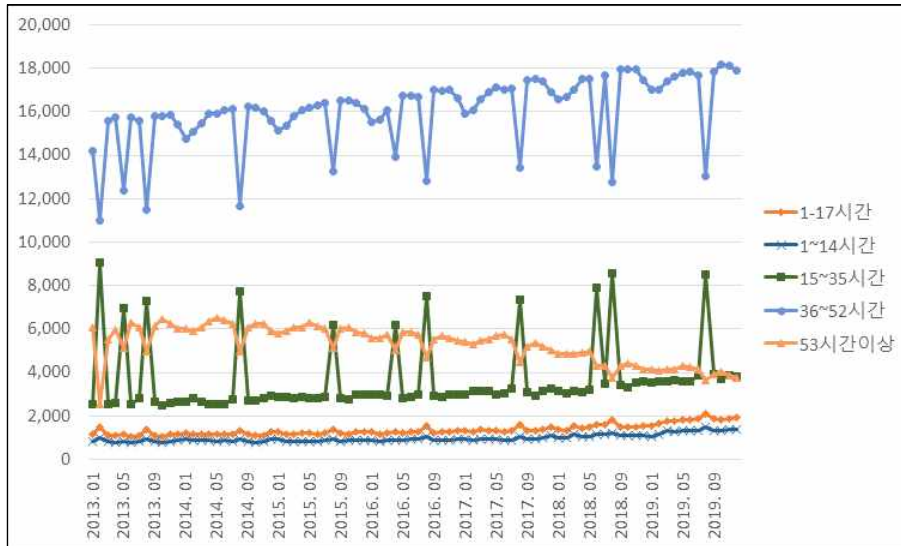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그림 17>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를 나타낸 것이다.⁶⁾ ‘53시간 이상’ 취업자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2018년 7월부터 ‘53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조금 더 줄어들었다.

반면 다른 시간대 취업자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36~52시간’대 취업자들이 그렇다. ‘15~35시간’ 취업자나 ‘1~14시간’ 혹은 ‘1~17시간’ 취업자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 취업자수는 매월 15일이 낀 주(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취업상황을 그 다음 주에 조사해서 그걸 통계청은 그 달 전체 취업자수로 대표한다. 그래서 ‘53시간 이상’과 ‘36~52시간’대 취업자수는 줄어들고 다른 시간대 취업자수는 늘어난다. 그래서 위 아래로 삐죽 튀어나온 달은 매월 15일이 낀 주에 휴일이 있는 달의 경우다. 8월은 언제나 위 아래로 튀어나오는데 이는 언제나 휴일인 8월 15일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휴일인 설이나 선거일이 15일 근방인 달도 그렇다.

[그림 17]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 변동(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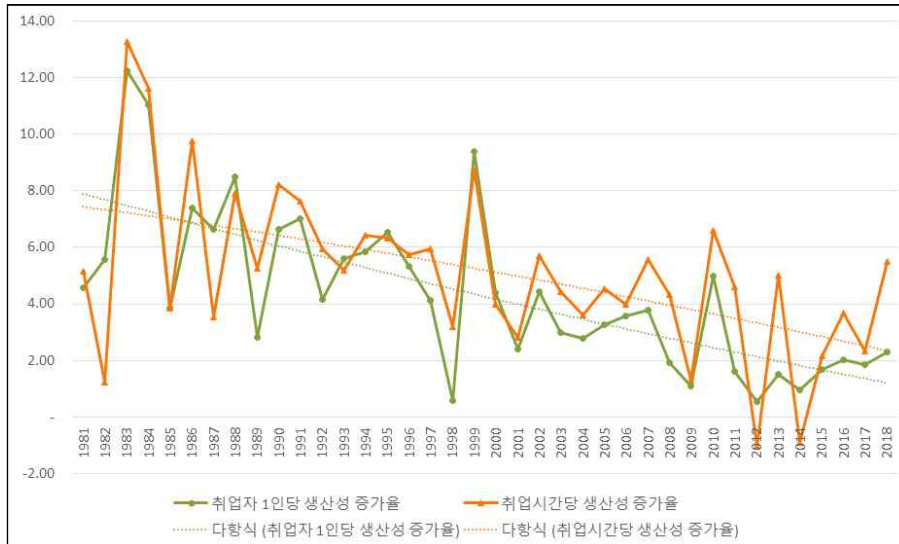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7) 생산성 증가율

생산성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대체로 둔화하고 있다. 취업시간당 생산성증가율 둔화 정도가 취업자 1인당 생산성증가율 둔화보다 덜 가파르다. 이는 당연한 것이 취업자 1인당 취업시간이 감소해서 취업시간당 생산성증가율이 취업자 1인당 생산성증가율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한편 2018년 취업시간당 생산성증가율은 꽤 높아졌다. 최저임금 상승, 300인 이산 사업장에서의 52시간 상한제 시행, 자동화 등을 통한 인력의 타이트한 이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림 18] 취업자 1인당 생산성 증가율과 취업시간당 생산성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포털

8) 삼성의 지배력 증대

지난 경제위기 이후 재벌의 지배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의 지배력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 삼성과 2, 3위 재벌과의 격차 현저해지고 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는 수년간 30-40조원의 이윤을 내고 있는데(삼성전자의 2018년 순이익규모는 사우디 석유기업 아람코, 미국의 애플, 중국의 공상은행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제조업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가장 이윤이 많이 났을 때가 10조 정도였고 현재는 이에도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 2위 기업은 계속 바뀌지만 1위는 계속해서 삼성전자다. 2007년말 전체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넷)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88%(=7.95%+포에 나타나지 않은 우선주 0.93%)였는데, 2013년에는 그 비중이 17.65%(=15.81%+1.84%)로 폭증했고,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1.75%(=19.57%+2.18%)로 늘었다. 2007년에는 시가총액 2위인 POSCO 시가총액의 1.85배였는데, 2013년에는 2위 현대차 4.72%(우선주 포함)의 3.74배로 급증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2위 SK하이닉스 4.05%의 5.37배로 늘었다(<표 6> 참조). 그리고 삼성계열사 중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전체 주식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⁷⁾ 또한

삼성전자(연결기준)는 2019년 3사분기 현재 이익잉여금이 252조에 이르는데 이것도 2017년과 2018년에 도합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배당을 하고도 그렇다. 2018-2019년에는 이익 규모에 비해 투자를 그리 많이 하지 않으면서, 100조원에 이르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삼성이 저번 국정농단에 연루되면서 애기된 뇌물액수는 수십억 혹은 기껏 기백억이었는데 이는 삼성의 현금성 자산의 수천분의 1 혹은 수만분의 1에 불과하다).⁸⁾ 이렇게 막대한 이익잉여금에 기초해 천문학적인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자실행 여부를 통해 정권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고, 지금은 잠깐 잠잠해 있지만 언제 다시 정치, 사법, 언론, 문화예술계를 매수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기에 나설지 모를 일이다. 삼성의 지배가 강화 되면 될수록 법치는 훼손되고,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 억압은 우리사회의 상수가 될 것이다.

[표 6] 10대 주식종목의 시가총액 변화(%)

2007년 12월 27일		2013년 12월 27일		2019년 12월 27일	
기업	시가총액 비중	기업	시가총액 비중	기업	시가총액 비중
삼성전자	7.95	삼성전자	15.81	삼성전자	19.57
POSCO	4.80	현대차	3.89	SK하이닉스	4.05
현대중공업	3.24	POSCO	2.21	삼성전자우	2.18
한국전력	2.42	현대모비스	2.16	NAVER	1.75
국민은행	2.22	SK하이닉스	2.00	삼성바이오로직스	1.65
신한지주	2.01	NAVER	1.86	현대차	1.49
SK텔레콤	1.93	삼성전자우	1.84	현대모비스	1.42
LG필립스LCD	1.62	기아차	1.74	셀트리온	1.37
SK에너지	1.58	신한지주	1.71	LG화학	1.27
현대차	1.48	한국전력	1.71	신한지주	1.21

자료: 한국거래소

9) 소결

7)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040402> 를 참조하라.

8)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1114001273> 를 참조하라.

수출과 투자를 통해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경제는 IMF 위기 이후 성장률이 현저히 둔화되었다. 최근 들어 성장률은 더욱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매우 낮아 디플레이션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고,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들어 국내총생산 경상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도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여러 측면에서 IMF 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저성장, 즉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고용상황이 좋을 리 없다. 2018년 내내 고용쇼크 논란이 지속되었고 2019에는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는 주로는 정부 주도의 노인 초단기 일자리 증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한편 취업자수 증가는 2019년 들어 예년수준을 회복했지만 취업자 전체의 총취업시간 기준으로는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관련해서 2019년 취업시간당 생산성 증가율은 꽤 높아졌다.

한편 한국경제에서 삼성의 가공할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정부부채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양호한데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 의지나 노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국회 안에 재정균형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강고한 때문으로 짐작이 된다. 그리고 금리 수준은 이미 매우 낮은 상태에 있고, 만일 새로운 위기가 도래한다면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가로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상태다.

3. 새로운 위기 가능성과 한국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10월, 즉 2019년을 2-3개월 앞둔 시점에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로 예측했다. 그런데 그 1년 뒤인 2019년 10월, 즉 2019년 마감을 2-3개월 앞둔 시점에 2019년 경제성장률이 3.0%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 사이에 0.7% 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2019년 경제상황을 따라가면서 조정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각각 같은 시기에 2.6%와 2.0%로 예측했다. 이번에도 0.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기관의 경제 예측이 그리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뿐이 아니다. 경제위기 발생 예측은 더더욱 하지 못하고 그 때의 성장률을 예측은 실제와 너무도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경제위기라는 것이 어떤 추세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질적인 단절의 요소가 있는데 주류경제학 예측에는 이런 개념이나 이에 기초한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2007/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예측한 주류 경제기관들과 경제학자들은 거의 없었다. 케인스주의 경향의 경제학자들 일부가 주택시장의 거품을 약간 우려한 정도다.

이런 사정을 전제하고 2019년 10월에 이루어진 국제통화기금의 내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성장률 예측을 인용해 보면, 각각 3.4%와 2.2%이다. 2018년 10월에 이루어진 2019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성장률 예측치보다 각각 0.3%포인트와 0.4%포인트 낮은 예측치다. 이 예측이 정확성 여부는 물론 2020년을 지내 봐야 할 것이다.

예측만으로 보면 2020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2019년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단순히 이런 성장률의 추세상의 하락에만 그칠까? 즉 순환적 위기, 즉 공황의 가능성은 없을까?

세계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미국경제에서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1) 미국경제의 새로운 위기 요소들

공황은 개도국의 외환/외채위기를 논외로 한다면⁹⁾ 대체로 호황 이후 과잉생산, 특히 투

9) 한국경제의 경우 당분간 외환/외채위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수년간 경상수지 흑자로 순대외자산이 5,000억불 가량 있고(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 수치는 -2,000억불이 넘었다).

자본이 발생하면서 온다.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IT) 산업에서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황과 2000년대 중반 주택의 과잉생산 이후 위기에서처럼 말이다. 무제한적 생산 경향에 비해 소비(생산적 소비=투자와 가계소비를 포함한다)가 이에 못 미치고 불균형이 누적되어 과잉생산에 이른다. 과잉생산과 함께 경제 전체에 형성된 거품이 붕괴한다. 그런데 전형적인 공황 혹은 경제위기를 주기적으로 겪는 세계경제의 중심 미국경제에서 지난 위기 이후 공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지부진한 회복과정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런데 지지부진한 성장도 여러 해 계속되면 이러저러한 부문에서 과잉생산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 과잉생산은 소비(생산적 소비=투자와 가계소비의 합)에 비해 ‘상대적’으로만 과잉인 것이어서 지지부진한 성장이라고 해서 공황의 싹이 자라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공황은 7-11년 정도의 주기를 가진다. 최근 많은 경제기관들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미국자본주의가 회복세가 비록 약하지만 현재 10년 이상 사상 최장 회복기간을 경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얘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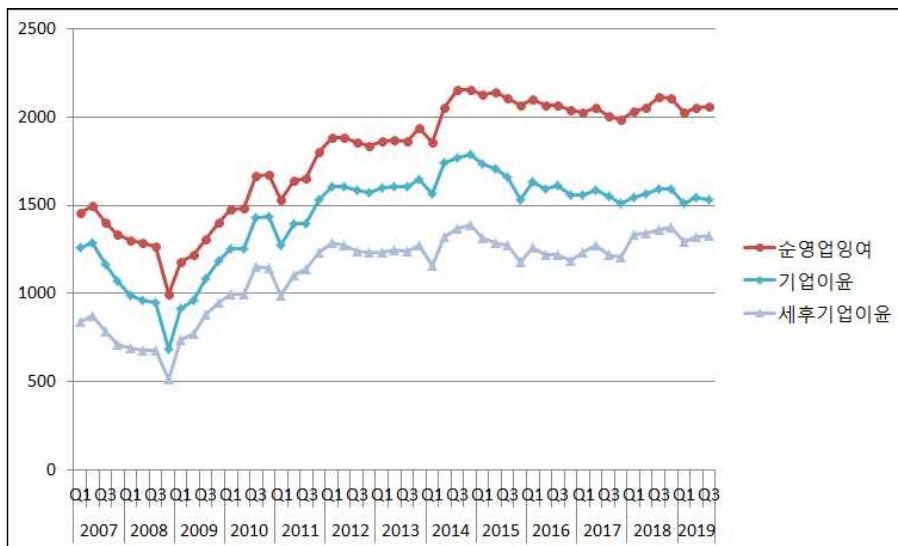
(1) 주식시장의 투기거품 형성

지난 금융위기 이후 2014년 3사분기에 미국 법인기업의 순영업이익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자 지불 이후 기업이익과 세후기업이익은 2014년 4사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이후 이들 이익지표는 대체로 정체하거나 하락했다(<그림 19> 참조). 그런데 미국 대형주 500종목으로 만들어진 주가지수 에스앤피 500(S&P 500) 지수는 2014년 3사분기 대비 2019년 9월말에는 51% 가량 상승했고, 2019년 말에는 거의 64%가 상승하였다. 이익은 하락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표 7>, <그림 19> 참조).

주가도 오르고 해서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대 기업 일부가 이익을 못 내고 부채가 늘어 가면서 전체 주식시장의 상승에 덩달아 올라갔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순간 하락하면서 전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 위기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상대적으로 부실한 기업들이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대기업 일부는 이익을 별로 못 내고 있거나(GE, DELL), 이익은 꽤 내고 있으나 현금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Exxon Mobil¹⁰) 등이 꽤 있다. 또한 디

지털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에 입각한 대규모 기술기업 중에는 이익이 아예 나지 않거나(UBER, Lyft, TESLA) 주가에 비해 이익이 현저히 작은 기업(Amazon)도 있다.¹¹⁾

[그림 19] 미국 법인기업 이윤(2007년 1사분기-2019년 3사분기)



자료: 미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

[표 7] 주식시장 거품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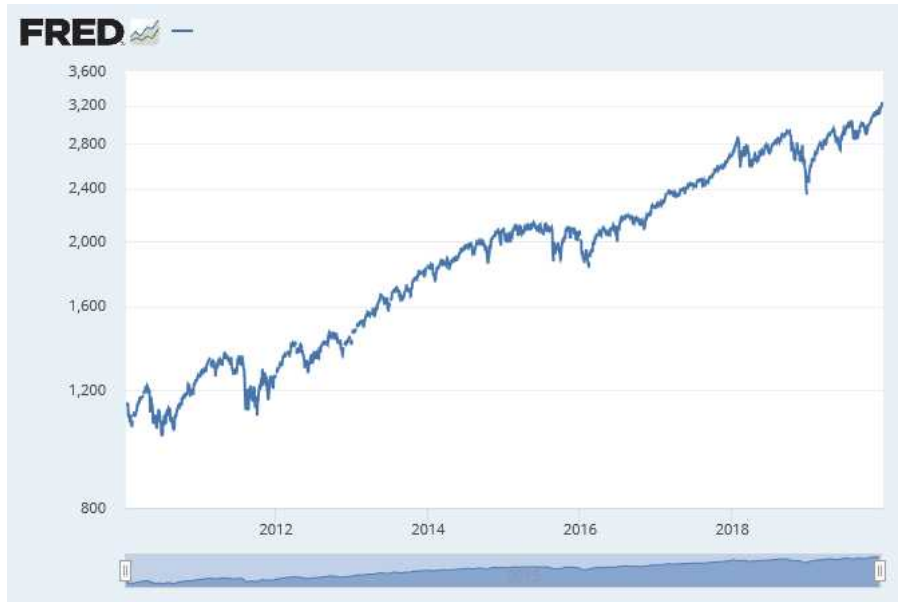
	S&P 500 지수 및 등락률
2014.9.30	1972.29
2019.9.30	2976.74
2019.12.31	3230.78
2014.9.30/2019.9.30	51%
2014.9.30/2019.12.31	64%

자료: FRED(<https://fred.stlouisfed.org/>)

10) 거대 석유기업 Exxon Mobil은 누적 이윤이 상당했으나 그 이윤을 자기주식 매입하는데 탕진했고 지금은 성장률 둔화, 셰일오일 개발 등 경쟁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전망 불투명 등으로 고전하고 있으면서 현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11) <https://finance.yahoo.com/> 에서 각 기업의 요약(주가수익비율, 시가총액 등), 재무제표, 주가 등을 참조하라.

[그림 20] S&P 500 지수(2010.1.11.-2019.12.26.)



자료: FRED(<https://fred.stlouisfed.org/>)

(2) 미국 제조업 축소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19년 12월 47.2를 기록해(50 이하면 축소) 제조업 축소가 12월까지 연속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¹²⁾ 미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낮아 제조업 축소가 당장 경제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추세가 몇 달만 더 지속된다면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서비스업구매관리자 지수는 서비스업은 팽창중이다.

(3) 일부 산업의 과열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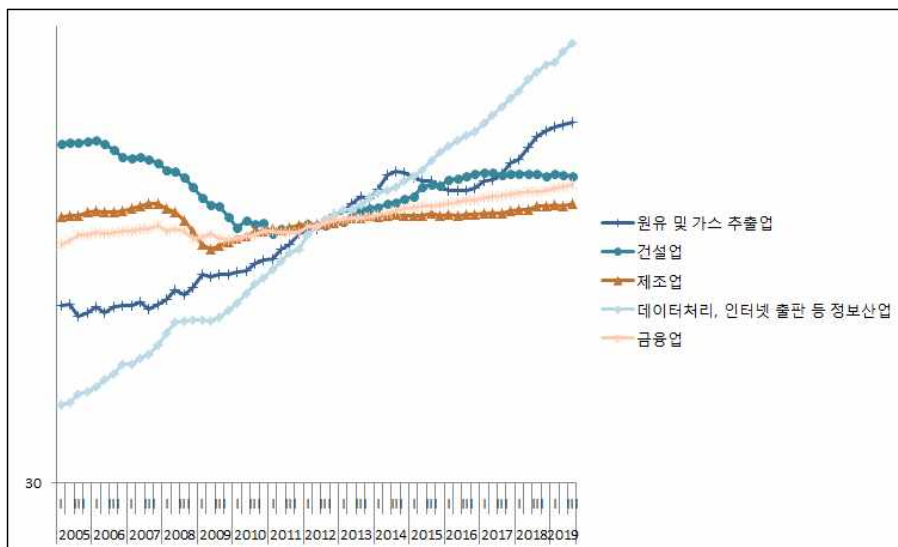
낮은 성장률 하에서도 일부 산업은 과열양상을 보인다. 원유 및 가스 추출업과 데이터처리, 인터넷 출판 등 정보산업이 대표적이다(<그림 21> 참조).

12) <https://www.instituteforsupplymanagement.org/ismreport/mfgrob.cfm?SSO=1>를 참조하라.

미국의 원유 및 가스추출업은 2010년대 이후 가파른 상승을 하다가 2014년 말부터 2015년 2016년 유가하락으로 한차례 후퇴를 했다가 그 후 다시 팽창을 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들은 2015-16년 유가하락으로 인한 위기로 인해 재무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런 곤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미국의 셰일오일 산업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산유국과 러시아와 경쟁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2015-16년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인다. 다만 이 경우는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의 산유국에서 미국이 야기한 정정불안이 해소되고 원유생산이 정상화될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둔화로 인한 원유수요 성장정체로 인한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러시아, OPEC의 연이은 감산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일 이런 시도가 실패해서 경쟁이 더욱 격화된다면 상당수의 미국 셰일업체의 도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데이터처리, 인터넷 출판 등 정보산업의 성장은 더욱 경이적이다. 지난 위기 때 약간 주춤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의 불비례와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그림 21] 미국 주요 산업 생산지수 로그 그래프(2012=100)



자료: 미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

(4) 낮아진 미국의 시장가격 이윤율

위의 요소들은 시장가격 이윤율¹³⁾의 하락으로 수렴된다. <그림 22>는 미국 법인자본의 이윤율이다.¹⁴⁾ 각 경기순환의 위기국면에서 이 이윤율은 최저수준으로 내려간다. 미국 법인자본의 시장가격 이윤율은 지난 금융위기에서 2009년에 최저로 내려왔다가 위기가 극복된 후 2014년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그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이윤율 수준은 거의 동일하고 2019년도 3사분기까지의 이익상황을 보면¹⁵⁾ 2019년의 이윤율은 2018년보다 더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윤율 수준은 지난 두 차례 위기 국면에서의 최저 이윤율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각 위기 국면에서의 최저 수준의 이윤율은 상당한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도산 등 패닉적 상황과 함께 찾아온다. 다만 현재의 이윤율 수준은 위에서 열거한 요소들이나 다른 새로운 요소로 인한 충격이 있게 된다면 이내 이전 위기들에서의 최저 이윤율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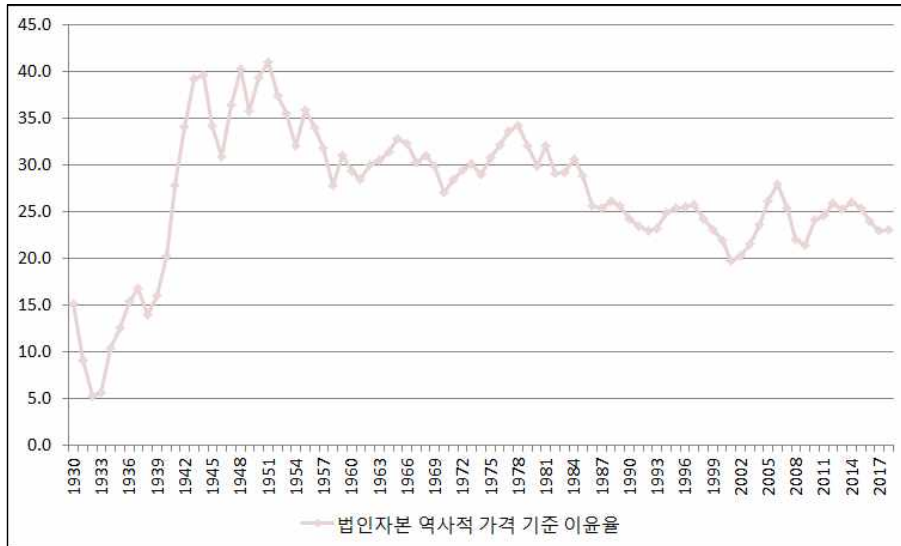
13) 이 이윤율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착취율에 의해 결정되는, 여러 경기순환들을 경과 하면서 장기에 걸쳐 관찰되는,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서의 생산가격 이윤율은 아니고, 다만 현실경쟁과 수급불균형 속에서 등락하는 이윤율로서 단기에 걸친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윤율이다.

14) 고정자산을 역사적가격으로 산정해 계산한 이윤율이다. 고정자산을 경상가격으로 산정해 계산한 이윤율과 대비되며 약간 차이가 난다. 학자들 사이에 어느 방식이 더 올바른지 논란이 되고 있다. 마르크스적 의미의 이윤율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김성구(2018), 앞의 책을 참조하고, 이에 근거해 미국경제의 이윤율을 도출한 작업에 대해서는 박하순(2018), “미국 등 주요국 및 한국 경제의 장기불황과 새로운 위기 전망”, 민주노총 (http://nodong.org/data_paper/7284301) 의 ‘보론: 미국경제의 마르크스적 이윤율’을 참조하라.

15)

<https://apps.bea.gov/iTable/iTable.cfm?reqid=19&step=2#reqid=19&step=2&isuri=1&1921=survey> 를 참고하라.

[그림 22] 미국 법인자본 이윤율



자료: 미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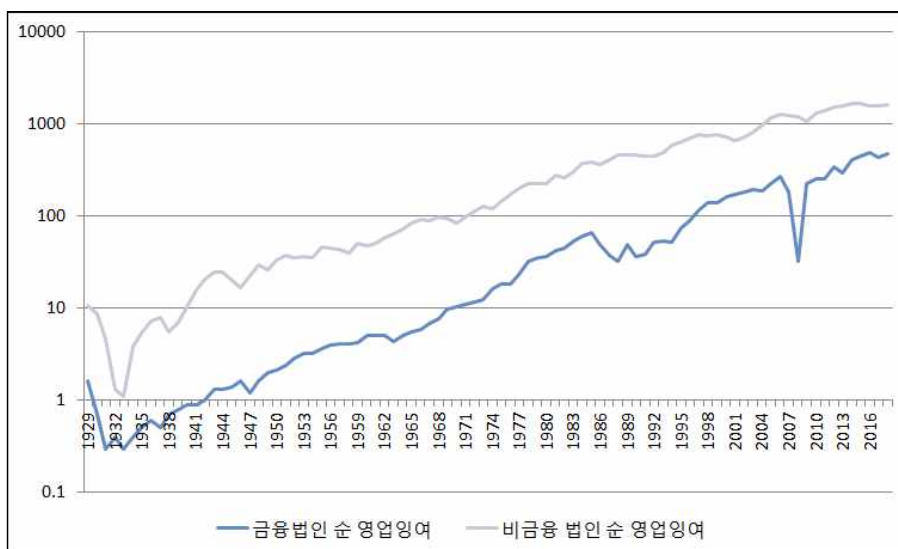
2) 예상되는 미국경제 위기의 양상

미국경제는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구조적 위기 속에서일지라도 경기순환상의 활황 국면에 있다. 그런데 미국경제의 이번 회복과정(활황 국면 포함)에서 성장률이 다른 때보다 낮으니 많은 경제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이 자주 경제위기(2개 분기 이상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를 예측하곤 했다. 내로라하는 일부 경제기관들이 2012년에도, 2015년에도, 2018년에도 곧 경제위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으나 번번이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어떤 기관은 자신들의 오류에 대해서 잘못했노라고 사과까지 해야 했다. 이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경제위기를 예측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저번 세계적인 경제위기 또는 금융위기를 몇몇 기관이나 전문가 빼곤 거의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확한 예측을 하겠노라고 의욕을 불태운 게 그 원인인 듯하다. 그들은 저번에는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너무 잦은 예측을 했는데 두 번 다 틀리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결국 미국경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지난 위기 이후 회복기간이 미국 역사상 최고로 길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앞서 열거한 변수들이나 그 외 추가적인 변수들 중 몇 개가 원인이 되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 있다고 해야겠다.

그러면 위기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지난 금융위기는 <그림 23>에서 보다시피 금융부분에 유례없는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 및 주택담보증권의 부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금융부문 충격의 동전의 뒷면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받은 일반 가계들이다. 그에 반해 유가상승과 원활하지 못한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피해를 본 자동차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금융부문에는 아주 커다란 위기는 아니었다. 이는 <그림 23>의 비금융 법인 순 영업잉여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다. 지난 위기가 금융부분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던 이유는 신자유주의적 금융규제 완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위기가 꼭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라는 법은 없다. 위기의 강도가 금융법인의 위기는 저번보다는 더 약하고, 비금융법인의 위기는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윤을 별로 못내는 전통 제조업 혹은 이윤을 거의 못 내거나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일부 거대 기술기업들 등이 문제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금융법인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금융법인도 일정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림 23] 미국 금융법인 순 영업잉여와 비금융 법인 순 영업잉여



자료: 미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편 세계 주요국 경제의 위기로의 진입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이 이번에 도래할 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이다. 지난 위기 이후 회복과정도 세계적으로는 지지부진한 회복과정이었는

데 이번에 새롭게 대두될 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은 더욱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 여력 약화, (그 효과도 별반 크지 않지만) 이자율 인하폭의 축소, 인구 성장 둔화 혹은 인구감소 등 때문이다. 주요국에서 제로금리(혹은 마이너스 금리)나 양적완화가 지난 위기에서의 회복과정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산업혁명이 없다면 장기이윤율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¹⁶⁾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실체가 있을 경우(노동생산성의 상당한 상승 등) 위기로부터의 회복의 모습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생산성 상승의 모습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여타 주요국 경제의 위기적 상황

유로존 경제는 미국경제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 있다. 독일경제는 미 중 무역 갈등, 영국의 브렉시트 소동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위기에 근접했다가 빠져나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심각한 이탈리아는 1년간을 거의 제로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유로존은 이 위기를 완화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미국경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자신은 미국경제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중국경제도 성장률이 예전보다는 못하다. 저번 위기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정부지출 증대가 세계경제 위기를 그나마 더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국가부채 수준은 미국이나 유로존 국가보다는 덜 심각하기는 하지만 경기부양을 마음껏 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는 아니다.

일본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실업률이 매우 낮다고는 하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세계 1위이고, 결정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노인병적 경제상황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당장은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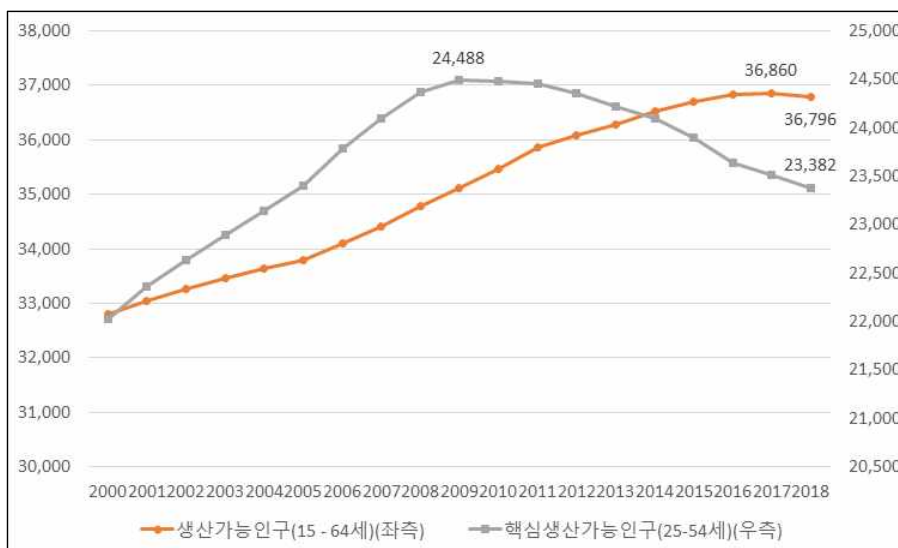
16) 과거 30년간 1990년대의 낮은 이윤율 수준이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는 자본생산성의 하락을 착취율의 증대로 상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하순(2018), 위의 글을 참조하라.

4) 한국경제 전망

미국 등 세계 주요국 경제의 전개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면 한국경제는 이후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한국경제는 중심부 경제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강하다. 이들 경제가 구조적 위기하의 순환적 경제위기에 빠지면 한국경제도 경제위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는 정부부채 규모, 그리고 앞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대외순자산 측면에서 예전에 보지 못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도 제조업 가동률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수출비중이 매우 큰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미 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국제교역 축소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해외시장에 의존해 지나치게 그 비중이 팽창되어 있는 산업부문(예를 들어 조선,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 전기전자기기, 석유화학 등)은 이번에 새롭게 세계적인 위기가 도래한다면 중국 등의 추격, 국제 경쟁조건의 변화 등의 변수가 가세하면서 그 취약성이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의 경우 새로운 위기가 도래하면 자동차, 조선 등은 지난 위기에서 채 회복이 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다시피 위기로부터의 회복에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중국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어서 더욱 더 그럴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핵심생산가능인구(25-54세)



자료: FRED(<https://fred.stlouisfed.org/>)

한편 수출증대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위기로의 진입시기이든 위기에서의 회복시기이든 한국경제의 만성적인 내수부진의 주요한 변수가 될 인구변수를 잠깐 살펴보자.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핵심생산가능인구(25-54세)의 감소는 노동력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경제 전체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측면은 이들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다(이들 중에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 연령계층이 단순히 노동력공급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들을 위한 공장건설이나 기계의 도입, 사무실과 주택의 건설 등은 경제 전체의 주요한 수요를 구성한다. 이들 인구계층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수요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거 25년 동안 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사망률은 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래서 15세 이하 인구도 25세 이하 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결국 앞으로 25년간 생산가능인구든 핵심생산가능인구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이로 인한 한국경제의 수요부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인구성장 정체,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핵심생산가능인구(25-54세)의 감소 그 자체가 공황 혹은 순환적 위기의 원인은 아니지만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제위기에서의 회복을 매우 더디게 만들 것이다. 불황 시기에 수요증가를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위기와 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은 지금까지보다 더 심각한 장기불황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크고 작은 부실기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로 판단컨대 정부와 자본은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때로는 상황을 도리어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